

실종된 '여의도 정치' ...여야 협의체로 살릴 수 있을까

초월회 이어 정치협상회의도 '반쪽 참석'

'2+2+2 협의체' 주목...검찰개혁 입장차 관건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러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종된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달여 간의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는 동안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는 사라지고, 그 빈 자리를 서초동과 광화문의 '광장 정치'가 메우는 모양새였다. 국회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기간 진행된 국정감사 또한 민생은 뒷전이고 조국만 남은 '땡탕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에 문화상 국회의장은 지난 7

일 열린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에서 "이대로 가면 대의 민주주의는 죽는다"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종된 여의도 정치는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 위기일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정국을 풀어야 하는 책임이 여야 지도부마저도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초월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쟁을 위한 성토장이 됐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만든 정치협상회의에선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가 일정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11일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들이 '협치' 의지는 않은 채, 6개월 앞둔 총선만 바라보며 지지층 결집에만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 정치'의 실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1차 회의를 갖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이른바 '2+2+2 협의체'가 정치 복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였다.

이날 회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회동에서 합의하며 열리게 됐다.

여야는 첫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먼저 논의했다.

회의에는 3당 원내대표와 함께 각 원내대표가 지정된 1명이 참석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배석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검찰에 대한 보호능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립은 정권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한 길길이 여전히 멀어 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의회정치를 살리

고자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1

아베·李총리 회담 열리나?...“韓과 대화 기회 달을 생각없어”

“韓은 중요한 이웃 나라...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가 16일 한국과의 대화를 계속 이

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 아베 총리와

의 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대화는 늘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달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 등을 위해 일·한 혹은 일·미·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 총리의 방일을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4·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거듭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 간의 약속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국 사퇴’ 보고에 침묵 지킨

윤석열, 국감서 무슨말 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장 잡대 의혹' 보도 논란, 검찰의 자체 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서거나 공식 발언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이에 산적한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해 검찰 조직 수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하는 여야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다. 검찰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는 여당과 엄중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을 주문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창장 위조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선제 기소한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5)를, 응동학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총독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말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준천씨가 윤 총장을 자신의 별장에 불러 접대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의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12개 중점사업 예산반영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개 전남중점사업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